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

지난해 520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면서 수출주도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가 지난달 20일 오전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관련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홍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작년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크게 기여한 에너지업계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이날 인사회에는 수출유공자로 선정된 구자영 SK 이노베이션 사장, 알 수베이 S오일 최고경영자 현장근로자(GS칼텍스), 신입사원(가스공사), 에너지복지 홍보대사인 텔런트 박진희씨 등이 릴레이 신년인사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특히, 장애인 학생들로 구성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끝난 후 이들에게 격려금 전달식도 있었다.



김중겸 한전 사장, 2013대구세계에너지총회 조직위원장 선출

김중겸 한국전력 사장이 2013 대구 세계에너지총회(WEC) 제2대 조직위원장을 맡는다.



2013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2012년도 제1차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중겸 한전 사장을 제2대 조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김중겸 위원장은 남은 준비기간 동안 대구총회의 성공을 위해 WEC 93개 회원국 주요 인사를 초청, 글로벌 에너지 기업의 총회 스폰서 및 전시회 참여를 유도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또 국내 에너지 관련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한편, 일반 국민도 대구총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12년 신재생에너지 확대 해법은

• 발전 사업자간 경쟁 유도 '의무할당제' 연착륙 관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각 발전 사업자가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는 제도다.

주관 부처는 지식경제부다. 의무할당제를 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2010년 3월 국회를 통과했다. 2012년이 원년이다.

RPS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의무화하고 활성화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해 비용 절감은 물론 신기술 개발을 도모하기에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래 에너지 기술력을 발전시키는 데도 긍정적이다. 주요 발전 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이다.

한편 올해 RPS 제도 시행으로 발전차액지원제(FIT)는 2011년을 끝으로 폐지됐다. 2001년 10월 도입된 FIT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평균 발전 단가를 제외한 차액을 발전 보조금 형태로 지불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발전 차액이 급증해 예산상의 문제로 이 제도를 폐지했다.

풍력발전사업 제주에너지공사, 자본금 1000억 원 규모로 6월 출범

• 신재생에너지 개발도 맡아

제주의 자연을 공공자원으로 개발 활용하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최대 자본금 1000억 원 규모로 출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공사의 주요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와 석유 석탄 등의 생산과 수송, 분배, 판매 등 사업과 에너지연구기술센터 운영, 풍력발전시설 유지 관리, 집단에너지사업 등이다.

제주도는 에너지공사를 통해 해상풍력 등을 공공자원화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은 최대 1000억 원 규모다. 자본금은 제주도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했다.

공사의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제주도지사가 임명한다.



실제 제주도가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운영의 경제성 분석을 위해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도 응답자 87%가 제주 풍력발전의 사업 주체는 지방공기업이 맡아야 한다고 답해 제주의 자연을 공공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다.

● 정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녹색산업 해외진출 박차

●
• 녹색산업 금융지원 확대, 녹색 ODA 및 국제협력 강화

정부는 녹색성장 공고화를 위해, 그간 다소 부진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녹색사업 해외진출 지원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지난달 10일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기존에 추진 중인 '녹색성장 5개년 계획' 투자(20조 6000억 원)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오는 6월 신재생



에너지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해 녹색투자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이행비용을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반영하고, 재정지원 규모도 작년의 1290억 원에서 1340억 원으로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7%)를 신설, 세제혜택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달 중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에너지 효율제고방안(작년 6월 마련)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책도 마련키로 했다.

수출금융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국제기구 등을 활용, 녹색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녹색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 금융지원을 지난해 3조 8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늘렸다.

뿐만 아니라 녹색 대외개발원조(ODA) 비중을 지난 2010년 16.6%에서 오는 2013년까지 25%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EDCF 지원 금리를 인하할 방침이다. KEA